

한전 등 민영화 추진... 혁신도시 빈 껍데기 되나

“호남 미래 짓밟는 처사” 들끓는 민심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물거품 우려 ‘균형발전 그르치지 말라’ 강력 경고

정부가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에 이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핵심 기관 이전 민영화까지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민들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짓밟는 처사”라며 분노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혁신도시 재검토의 명분으로 제시한 ‘사업효과 미약’과 ‘높은 토지 분양가’, ‘특화전략 부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노골적으로 폐기하려는 ‘단검’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추진상황= 공동혁신도시는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 726만4천㎡에 건설된다. 지난해 11월8일 기공식을 가진 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은 2010년 한전 이전을 시작으로 2012년 사업이 모두 완료된다. 사업비는 1조 6천767억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한전과 한국농촌공사 등 17개로 근무인력은 5천여명에 달하며, 예산규모는 41조7천억원, 지방세 납부액만 137억원에 달한다. 이전 기관의 산하기관만 20여개가 넘고 협력업체 등은 800여개로 추산돼 광주·전남의 미래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토지·지장물 보상 평균이 91%(보상액 3천2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빠른 진척을 보이는 등 초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기업 민영화와 한전=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공동혁신도시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이 중 공동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한전은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핵심 성장엔진으로 꼽히는 공기업이다. 외형적으로도 예산이 29조5천482억원에 달하는 데다 근무인원만 1천142명에 달하는 최대 공공기관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전을 위해 가장 큰 공을 들인 기관이기도 하다.

한전과 연관 기관인 한전기공, 한전 KDN,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해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또 전남 지역의 원자력, 화력, 석유화학 등의 산업기반과 연계해 광주 뿐 아니라 전남지역을 아우르는 에너지산업 네트워크형 ‘초광역 클러스터’를 추진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로 인해 한전



정부가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에 나서면서, 사업 축소·변질이 예상됨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건설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8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이 열릴 당시 나주시 금천면 일대 혁신도시 현장.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전이 무산될 경우 공동혁신도시 사업은 그야말로 빈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지역민 반발=전문가들은 정부가 내세운 혁신도시 분양가가 높다는 것은 명분을 위한 명분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혁신도시 관련 회의에서 분양가를 토지보상가를 고려해 낮추도록 수차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해온 정부가 이제 와서 분양가를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혁신도시의 특화발전 전략이 없다는 것은 혁신도시 자체를 모르는 무지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지역의 산업적 기반과 성장가능성을 감안한 17개 기관을 유치, 에너지, IT, 농생물산업, 정보통신, 문화산업 등 특화 전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도

“혁신도시 선도기업들의 민영화나 통·폐합이 이뤄지면 혁신도시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 걱정된다”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혁신도시와 맞물린 것에 대해 우려했다.

신정훈 자치분권 전국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루 아침에 정부정책이 무효화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라며 공기업의 민영화 종단을 촉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혁신도시 계획대로 추진해야 공기업 先 이전 後 민영화를”

■ 광주·전남 단체장·국회의원 당선자 반응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광주·전남지역 18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16일 여권이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계획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무책임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선 혁신도시 이전, 후 민영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혁신도시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 혁신도시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와 시·도지사들의 회차원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이미 보상이 거의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착공식까지 가진 국가사업인 만큼 정권이 바뀌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혁신도시건설 사업 지원을 약속해준 만큼 과거와는 다른 일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서면 전남 나주의 최인기 의원(민주당, 나주·화순)은 “여권의 혁신도시 재조정 방침은 오만과 독선의 극치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혁신도시를 축소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선 당선자(민주당, 광주 동구)는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재조정한다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계획을 보완해야지 계획 자체를 축소하거나 취소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자는 또 “한전 민영화와 관련 ‘일단 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민영화해도 늦지 않다’며 “이달 말 열리는 광주시 정보고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공동으로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준태 당선자(무소속, 광주 남구)도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반드시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많은 약속을 발표했다가 여권이 나빠지면 거두어 들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 당선자는 또 “한전은 공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민영화 방안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의장인 이낙연 의원(민주당, 함평·영광·장성)은 “이명박 정부는 많은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려 하고 있으며, 민영화될 공기업은 지방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혁신도시를 빈털터리로 만들려 한다”며 “혁신 공기업이 빠진 혁신도시는 허당도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혁신도시를 기대했던 지방은 질망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의 중요정책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이명박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며 “정부의 혁신도시 수정 방침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리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빈익빈 부익부 구조를 더욱 확대 고착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은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하고, 광주·전남의 경우 시도민의 동의하에 추진해온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도가 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당선자(무소속, 전남 해남·완도·진도)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마저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이명박 정부는 정책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당선자는 또 “공기업 민영화를 꾀계로 혁신도시 건설을 멈추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전 등의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민영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철기자 redplane@

■ 수습대 오를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집중... “자칫 호남경제 붕괴 부를 수도”

국토해양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국토종합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호남 등 지방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 수정의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작년 4월부터 수도권 계획적 관리 공동연구단을 가동중이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누고 있는 3대 권역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포괄적인 규제를 해제하고 필요한 지역에만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균형발전정책 수정=국토부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의 수정에 나서고 있다. 당장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토부는 혁신도시 조성 사업을 수정,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 ‘5+2 광역경제권’ 개발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문제점 및 대응방안’보고서에서 혁신도시 내의 산하연

클러스터 기능을 특화, 광역경제권의 거점 및 발전 전략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전력 산업 기능군으로 묶고 호남권의 특성화 발전 전략으로 광주를 LED 조명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호남 낙후로 이어지나=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풀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정에 나서는데 대해 호남 여론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당장 수도권 규제 완화로 기업 도시 및 혁신도시 기업 유치가 더욱 지지부진

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도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중앙과 지방은 물론 지역간 불균형도 심화시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호남이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정 등으로 과거 정권에서처럼 경제적 소외를 겪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마저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주)세종투어
문의 02-222-2209

전일정 노심!! 노심선!!

제주도 3박4일 300,000원

제주도 3박4일 350,000원

제주도 3박4일 450,000원

세종투어 여행상품 경쟁사 - 포인트 선지급 받고

할부유 30만 원만 하시면 최대 50만 원까지 포인트 지급해 주는 여행

제주도 3박4일 150,000원

제주도 3박4일 110,000원

국유림 아늑한 숲속에서 제주기숙사 2박3일

290,000원 - 140,000원

200,000원 - 99,000원

선지급도 인프린?

2012년 제주 미끼를 흥진

제주도 3박4일 300,000원

제주도 3박4일 350,000원

제주도 3박4일 450,000원

※ 실제 방문 시에는 별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약 시에는 반드시 전화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 예약금 환불 및 취소료는 별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약금 환불 및 취소료는 별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